

野5당 ‘탄핵 의원연대’ 출범... “반민주적尹정권 끝장”

민주혁신·진보당 등 43명 참여 발족 “연대 확대·전체 의원 200명 모을 것” 사회 대개혁 준비 등 본격 행동 도입 민주 지도부 “당에서 논의된바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5당 의원 43명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회의원 연대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탄핵에 필요한 국회 의결 정족수인 200석 확보를 위한 연대 확대에 나서며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연대 구성은 민주당 29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 1명 등 국회의원 43명이 이름을 올렸다.

광주·전남지역 의원 가운데는 김원아·권향엽·김문수·조계원·민형배·문금주·전진숙 의원 등 7명이 참여했다.

공동대표는 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맡았다.

박수현 의원은 “오늘의 탄핵연대 출범은 무도하고 무능하고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진정한 애국운동”이라며 “진일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



황운하, 박수현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대표의원 등이1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발족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켜내는 국권 수호운동이고 독립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을 연이어 거부하는 행위는 이해충돌이고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2016년 국정농단 탄핵 당시 광장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께 다시 촛불을 들어달라고 요청드릴 수 없다. 이제 해야 한다면 정치와 국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소추문 내) 탄핵소추 사유도 당초 17개에서 21개로 늘어났다. (탄핵 사유의) 중대성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범야권이 다 동참해도 (탄핵소추

안 가결에 필요한) 200석에서 부족한데 어떻게 채우냐는 우려도 있고 헌법재판소 인용 문제를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지지 않는 노력과 투쟁이 용기와 독재를 물리칠 힘”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연대는 이날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 의원을 반드시 모으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탄핵연대는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임기 2년 6개월 동안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고,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채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실은 밝히지 않았다”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농단으로 국민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선언문에는 △탄핵 의원 연대 확대 노력 △김건희 특검법 통과 △윤 대통령 탄핵 이후를 가정한 사회 대개혁 준비 등을 담았다. 탄핵연대는 앞으로 탄핵소추안 발의·가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150명 이상), 가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 주장은 개별 의원의 입장으로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앞서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탄핵의원 연대 발족식은 국회의원 모임을 빙자한 사실상의 탄핵 집회를 국회에서 열겠다는 의도”라며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실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을 남용하는 행태는 규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단체장 성과 따라 대선 결정될 것”

기초자치단체장 연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기초자치단체장 성과에 따라 운명을 가를 대선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내 상설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위원회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장 연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함께 했다.

이재명 대표는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여러분이 민주당을 받치는 든든한 뿌리다. 지역에서 잘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여러번 성과에 따라 다음 지선, 지선을 넘어 이 나라 운명을 가를 대선도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당 출신 단체

장이 계신 곳들은 지방 행정이 차별화돼야 하고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며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즐겨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울 수 있는 따뜻하고 세심한, 전문성 있는 행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공동선언문에서 “재정 파탄과 양극화 심화, 지방 소멸의 길로 끝없이 역행·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운영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며 “지자체 차원의 기본 사회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재정정책시행을 강력 규탄한다”며 “양극화와 지방소멸을 심화하는 부자감세와 친기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세입 결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여야, 70여 개 법안 정기국회 처리 공감대

AI법·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등 양당 정책위 의장 민생 의제 논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 법안 70여 개를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의제를 논의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에 제안한) 여러 법안이 있지만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하자면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이 있었다”며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중에는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법안, AI(인공지능)법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좀 더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를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수용 가능한 민생법안 등에 대해 논의 후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의장, 진성준 의장,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지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여야는) 대표적으로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당 정책위 의장이랑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이다. 이 법안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향후 여야가 추가로 협상할 의제에 대해선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부분 더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16일 3차 장외집회 시민단체와 연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야 4당,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울 도심에서 3차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 30분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당 주최로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한 후, 오후 5시30분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하는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집회에 합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과 9일 연 1·2차 장외집회는 단독 주최했다.

하지만 16일 부터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해 장외 투쟁 동력을 한층 더 키우려는 모습이다.

14일은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 15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는 날이다.

3차 장외투쟁은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야4당도 참여한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6일 서초동 대검찰청 주변에서 개최하려던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정치검찰 해체’ 집회를 취소하고, 시민단체 집회에 민주당과 함께 합류하기로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계원, 오늘 국회서 석유화학산업 대안 토론회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사진)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의실에서 김원아·주철현·권향엽·김문수·문금주 의원과 공동으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 대안은 무엇인가’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사단법인 넥스트, Agora Energiewende, 여수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다.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확대와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등 산업지형 변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석유화학협회 정광하 연구조사본부장이 ‘국내 석유화학 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략’을 주제로, 사단법인 넥스트의 김수강 연구원이 ‘석유화학산업의 탈탄소



전환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어려우니 입주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힘들고, 하청업체와 지역 골목상권까지 도미노 현상처럼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 수 있도록 유의미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